

1997. 4.

해외출장결과보고서

○ 출장기간 : 1997. 2. 18 - 2. 22

(4박 5일)

○ 방 문 국 : 대 만

보 고 자 충주시의회의원

김 대 식

목 차

1. 출 장 기 간
2. 출 장 인 원
3. 방 문 국
4. 일정별방문처
5. 방 문 배 경
6. 방 문 취 지
7. 방 문 결 과
8. 이후경과보고
9. 대만핵폐기물 북한이송계약및문제점등
10. 종 합 의 건

1. 출장기간(4박5일)

- ☐ 출국 : 한국시간 '97. 2. 18 13:05(김포공항 발)
- ☐ 귀국 : 대만시간 '97. 2. 22 07:30

2. 출장인원 : 8명

- ☐ 충주 : 임호 변호사, 박일선 환경운동가, 김대식의원
- ☐ 청주 : 김운모의원, 김형근 사회운동가, 연철흙사업가
- ☐ 옥천 : 류재숙주부, 전윤희 환경운동가

3. 방 문 국 : 대만(대북시)

4. 일정별 방문처

- ☐ 2. 18 - 대만 환경단체와 간담회
- ☐ 2. 19 - 한국무역대표부 방문
- 대만 정부대표 면담
- ☐ 2. 20 - 기 자 회 견(대북기자 약 20명)
- 법 원 방 문
- 개신교, 불교, 천주교 지도자 방문,면담
- ☐ 2. 21 - 대북시, 시의회 방문, 시의원면담

5. 방 문 배 경

- '97. 1. 30 대만 핵 폐기물 북송에 대한 직접 저지행동 계획 발표와 더불어 남한강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발표 및 결의문 채택
- 충주에서 직접 저지결사대 대만 파견결의

6. 방 문 취 지

대만 핵 폐기물 북송은 우리 민족이 영구히 살아야 할 금수강산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키는 중대한 행위로서 모든 국민은 민족 생존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의 저지를 위해 단호히 나서야 하며 그러한 이유에서 충북지역 민간사절단을 구성,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의 기관단체 및 다양한 사회집단에게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여 핵폐기물 북송저지에 일조하고자 함.

- * 이번 방문의 특징 : 집회,시위를 통한 항의적 방문이 아니라 민간 외교사절단 형식으로 방문하여 대만내 반핵주의자, 합리적인 지식인, 정치인, 양심적인 종교단체들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7. 방 문 결 과

가. 현지상황

- 대만국민은 한국 환경단체가 대만내에서 활동에 대하여 대만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반핵 입장에 있던 민진당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들이 저지운동에서 이탈. 침묵하고 있는 상태였음.
- 핵폐기물 북송반대는 한국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국(노)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으로 야당관계자 접촉은 매우 어려웠으며 환경단체마저도 전면에서 나서서 도와주지 못함.
- 일례로 기자회견 장소를 구하지 못해 기자회견이 취소될 지경에 까지 이름

나. 활동상황 및 성과

- 2. 20일 11시 대만변호사(구광천-대만인권보호연맹회장)의 도움으로 그 직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대만 대북시지방법원에 제출함.
- 이후 대만 법원에서 보정명령(증거보완요구)예상→외무부,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보완 자료제출 → 이를 인정하면 공탁금(계약금 7천만 달러의 1/10정도)을 걸고 재판 진행 (핵폐기물 운반은 중단됨) → 이것이 기각되면 본안소송 제출예정하였으나, 기각
- 2. 21일 대북시의원과의 면담내용
 - . 대만으로 오지말고 미국에 가서 대만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확산시켜야 효과적이라는 조언이었고,
 - . 대만은 국제적 고립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과 4기 원전이 건설될 예정인데 핵연료를 일본에서 받기로 결정

일본에 대한 압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임.

- 변호사와 시의원을 우리지역(충주, 충북)에 초청하였는데 빠른 시일내에 방문하겠다고 함.
- 가처분을 법원에 접수시킨 것은 큰 성과로 보여지며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도 대만 변호사가 무료로 도와주기로 함.
- 가처분 신청과 대만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기자회견)

8. 이후 경과보고

- '97. 2. 25 : 대만 핵폐기물 북송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통보
(소송대리인 구광천 변호사 팩스 전달)
- '97. 3. 2 : 대만 핵폐기물 가처분 항고(대만 고등법원)
 - 항고인(9명) : 임호, 박일선, 박정민, 김대식, 김윤모, 김형근, 연철흙, 김상희, 류재숙
 - 피항고인 : 대만 전력공사
- '97. 4. 15 : 대만 고등법원으로 부터 대만 핵 폐기물 가처분 항고 기각
- 향후 계획 : 본안 소송제기(안기부 협조하에 방북도 불사)

9. 대만 핵 폐기물 북한 이송계약 내용 및 문제점 등

가. 북한반입 추진동향

- '97. 1. 13 : 대만 전력공사 사장, 대만 핵 폐기물 6만배럴을

2년내 북한에 처리하기로 계약하고, 향후 정부 승인 후 북한 선적할 예정임을 발표

- '97. 1. 24 : 북한은 정식 승인서를 대만전력공사에 보냄
- '97. 1. 27 : 핵 폐기물 선적 준비차 북한전문가 대만 도착

나. 핵 폐기물 매립 협정 체결내용

- 대만, 북한 '96년 10월경 부터 황해북도 평산 폐광지역에 핵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밀협상 극도의 보안유지하에 진행
- 매립대금 1단계 6만 배럴(배럴당/ 1,261달러) / 2단계 14만 배럴(배럴당 1,090달러)
- 후속절차 : 대만측 240만불 설비제공협의 완료

다. 대만 핵 폐기물 북한이전 배경

- 대만은 남서해안 서태평양에 위치한 란유섬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고 6기의 핵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해옴.
- 처분장 관리부실로 3만배럴 이상의 드럼으로 부식과 누출이 시작됨.
- 인근 해역과 토양의 방사능 오염으로 암사망자 급증, 인구 3천 명중 50명이 넘는 기형아 발생

-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발생과 원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대만정부는 2002년까지 핵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고 약속함.
- 핵 폐기물 매립을 위한 대만내 5곳의 후보지를 정하고 처분장을 물색했으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후보지를 확정 못함.
- 핵 폐기물 해외이전을 위해 러시아, 마셜군도, 북한등과 협의 진행 중 북한과 체결 북한과 체결 후 러시아와도 협정체결

라. 핵 폐기물의 위험성과 북한 반입의 문제점

- 전 세계적으로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없음.
- 저준위 핵 폐기물에도 플루토늄, 라듐 등 독성이 강한 방사능 핵종이 포함되어 있음.
- 폐광의 경우 무계획적으로 개발된 갱도와 채굴공간으로 인해 이곳을 흐르는 지하수 침투로 인한 방사능 오염
- 탄광지역은 단층과 파쇄대를 따라 형성되므로 극히 불안정한 지질 조건
- 핵 처분장 건설은 5년내지 10년이 소요되나 2년내 반입할 경우 야적수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 6만배럴 처리비용 6백억원은 최소한의 건설비용에도 못미침 (한국의 경우, 건설비용 7천 6백억원 예정(88년))

- 해상수송시 800톤 규모의 선박으로 1백회 이상 운반해야하므로 해일이나 조난사고시 심각한 방사능 오염유발, 더구나 북한.대만은 핵폐기물 운반처리 특수선박이 없음

마. 외교관계 동향

- UN 차원 : 유엔총회 군축위원회 매년 각국이 아프리카에 핵 폐기물을 보내지 말자는 결의를 하고 있음.

10. 종 합 의 견

핵 발전국가가 자국의 핵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원칙임에도 대만 전력공사의 핵 폐기물을 북에 수출하려는 계획은 대만 원자력 위원회를 비롯하여 대만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차원의 북한 반출저지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거니와 민족이 영구히 살아야 할 우리의 금수강산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키는 중대한 북한 정부의 만행에 대하여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중차대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민간사절단 누구만의 일일 수 없으며 4,500만 우리국민 모두가 나서고 지켜야 할 입장인 바,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서 금번 출장을 매우 보람있고 뜻깊은 활동이었음

을 자부하게 되는 것은 핵 폐기물로 인한 오염피해에 따른 국가간의 분쟁을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민간사절단이 합법적 활동을 전개함은 세계적으로 처음있는 일이며, 더우기 정부나 중앙에서가 아닌 지방에서의 시민운동 차원의 개척정신으로 이미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報日央中

台灣日報

五期星 日一十二月二年六十八國民華中 六年二月二十一日 星期五

反對台電將核廢料輸運北韓 南韓人士向台北地院遞狀

【記者李慶月／台北報導】台灣計將核廢料輸運北韓處置一事，南韓除了頻頻尋求國際聲討之外，亦首次將循「法律救濟」途徑，指向我國的法院。由南韓律師林虎說、律師、環保、宗教人士組成的民間使節團，昨日上午十一時，由南韓律師林虎說代表九人，向我國台北地方法院遞狀「聲請假處分」，要求法院禁止台電將核廢料輸運北韓；台北地方法院已正式受理，成為國際第一樁為核廢料事件，跨國尋求民事救濟的案例。

正當台電公司準備組團到國際原子能總署（IAEA）說明我國與北韓合作處理核廢料事宜之際，南韓民間人士已率先低台尋求我國法律救濟途徑。

昨日上午，南韓民間使節團在台北校友會館召開記者會時，強調該團為純民間團體代表，他們是在了解我國法律可以尋求民事救濟管，正式針對台電與北韓所簽定的核廢料合作處理契約，向我國台北地方法院「聲請假處分」，要求法院先禁止台電將核廢料輸運北韓。

臺電核廢運北韓處理

南韓環保團體聲請假處分

（李宛春／臺北訊）針對臺灣電力公司計畫將核廢料運往北韓的商業行為，昨日由十人組成的南韓民間使節團前往臺北地方法院遞出這項商業行為的假處分聲請，南韓方面希望藉由法律途徑能讓臺電上萬桶核廢料禁止運往北韓。

林虎說，南韓在與北韓無正式管道商談此事下，韓國人民認為臺灣為溫和、理性的國家，所以應該會以合理方式處理這個國際事件，故而前往法院聲請假處分。

동양일보 97.2.18



◇대만 핵폐기물 반입 저지 민간 사절단
한 반입 저지를 위한 중북민간사절단은 17일 대만 방문에 서 중북도청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가졌다. <황현구 기자>

조선일보 97.2.18

청서를 타이베이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남한강 환경운동연합 박
一(박일선 33)사무총장
을 비롯 9명으로 구성된
중북지역 민간대표단은 20
일 타이베이(臺北) 법원을
방문, 지난 1월 11일 대만
전력공사와 북한정부가 채
결한 핵폐기물 이전계약을
무효화하고 핵폐기물 선적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
청서를 내겠다고 17일 방
했다.

核폐기물 北반입 금지 가처분신청

대만법원에 제출기로

【清州(對泰鎮)가】충북
도내 시민단체(NGO)단체인
한국의 대만 핵폐기물 반입
한행선진중지가처분신

충북 시민 환경단체

기자회견장모습

('97. 2. 21 10:00)



가져온산정서를

대북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기념촬영

('97. 2. 21 11:00)

대북시의회의원과의

간담회

(앞으로의 전략 :

저지방빠 논의)

